

[ 기획 ]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결혼중개업 허가제로 불·탈법 막아야

"이미 동남아 등 국제결혼 중개는 자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 적극적인 관리만이 'एं터리 중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만난 A국제결혼정보업체 한 유진(49·캄보디아 연합회장) 사장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제결혼시장이 급속히 황폐화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자격 결혼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적 행태가 속출하면서 동남아 국제결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장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이 결혼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뒤로는 중개업자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몰려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단채로 맞선을 본 뒤 곧바로 '합방'을 시키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통역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영입에 나서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을 둘러싼 중개업체들의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선출발적인 결혼중개 품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남아 국제결혼의 경우 현지 중개시스템을 통해 여성을 모집, 관리,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 속성을 지니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조차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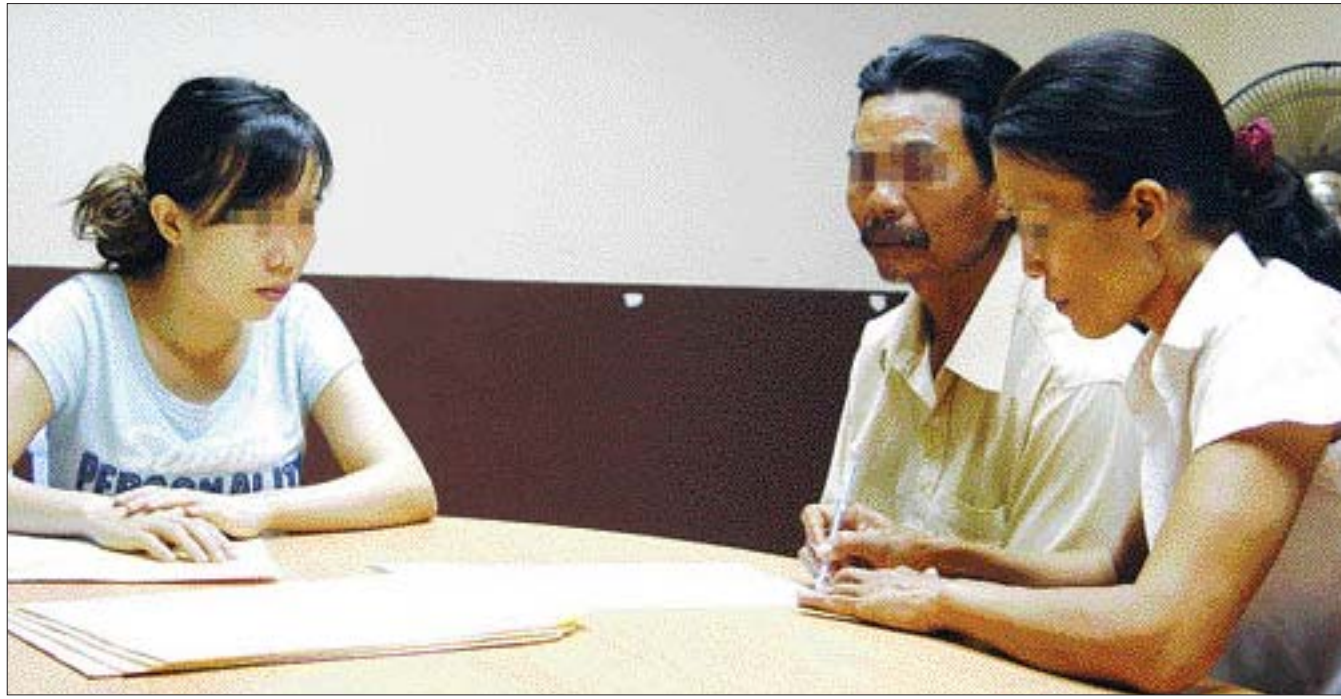
최근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은 국제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을 놓고 각종 사회단체나 정부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자격 작업'이 무자격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모두 허사로 돌아가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11개사가 참여한 캄보디아연합회를 조직했지만 업자들의 난립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10개월새 1~2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급증한 데다 베트남에서 넘어오는 업체들까지 합세하면서 중매과정 이 더욱 혼탁해졌다.

이들 영세 업자들은 현지 통역 등 일정한 중개시스템 없이 영입에 뛰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문통역 없이 결혼이 진행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데다 결혼성사 후에는 회사 문을 닫거나 잠적하는 업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연합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제2의 베트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혼정보사단 내 어떤 중개업자들의 '부실 중매' 관행 속에서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현지 관리를 매수하는가 하면 경쟁업체를 견찰하고 고발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는 '베트남 숙녀',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결혼하세요' 등 성차별 및 인종차별적 결혼광고로 인해 해당 국민들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국제결혼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신부들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이 난무할 만큼 현지인들의 시선이 끈질기다. 이는 중개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혼 승낙서 사인

한국 남성을 사위로 맞은 베트남 부부가 지난달 호치민 시내 한 호텔에서 '결혼승낙서'에 사인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제결혼은 신부 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은 다음날 결혼식을 치르는 등 '초특급'으로 진행돼 파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래는 지침금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

'맞선 후 바로 합방'...자격 미달 업체 난립 2005년 관련법안 제출...2년 넘게 '낮잠' 정부·지자체 관리, 업계 자정노력 필요

베트남은 또 농촌총각 자살 등 자국 청년들의 결혼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급증함에 결혼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선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간간히 내놓고 있을 뿐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까지 결혼정보업체들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우선하고자 하는 등 '온누리안'에 대한 대책이 '실적 쌓기'에 그치고 있다.

'온누리안'에 대한 무관심은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의 경우 지난 2005년 김춘진 의원 등 15명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2년이 넘도록 보검되지 않아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월에도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관련 업체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조차 통과를 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허가제 도입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법률 명시 ▲결혼정보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의

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제 도입 방향은 중개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기준을 갖춘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인력 및 여성단체 등은 ▲국제결혼 희망 남성에 대한 기록(정신병력, 이혼 경력 등) 제공 ▲통역 제공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결혼정보협회 김인수 대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또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가 동남아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음성적인 결혼중개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고

'결혼중개 법안' 처리 급하다

국제결혼이 매년 급증하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은 지난 2000년 1만2천여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에는 3만9천71건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전체 결혼건수(33만7천528건)의 11.6%를 차지했다.



김춘진

<국회의원·보건복지위>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에만 2천255명의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온누리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제결혼에는 결혼중개업자들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지어 세무서 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업이 성행하면서 국제결혼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내국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혼을 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신랑과 업체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신부

가 입국한 뒤 곧바로 가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촌 총각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은 4박5일 정도의 일정에 맞선, 결혼, 신혼여행 등이 모두 이뤄진다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 부재는 물론, 결혼 후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국내 여성들의 경우 농촌으로 시집가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농사일을 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을 부양하려는 저개발도상국 여성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국제결혼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2월에 발의된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결혼중개과정에서의 피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는 등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심의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다면 국제결혼의 출발적인 결혼과 정부태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앞장서서 법안 심의 무자격 업체 강력 규제를 다문화 사회 정착되려면 결혼 과정부터 정비해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Daein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011-625-0510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011-602-2233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973-9174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371-1900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with contact info 082-222-8446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